

우버, SKT와 손잡고 카카오에 정면승부… 4월 택시서비스

티맵모빌리티와 택시호출 JV 설립 이후 대리운전 등 단계적 출시 계획 일반택시와 동일요금 '시범운영' 1분기 내 택시 1000대로 확대키로 소개비 5만원, 축하금 15만원 등 혜택 커 기사들도 우버에 '만족감'

2015년 불법으로 몰려 한국에서 승차공유 사업을 철수했던 우버가 SK텔레콤과 손잡고 반격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주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티맵모빌리티는 우버와 택시 호출 공동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JV)을 설립해 오는 4월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대리운전 서비스 등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에서 분사해 공식 출범했다. SK텔레콤은 출범 단계에서 1조원의 기업 가



2015년 불법으로 몰려 한국에서 승차공유 사업을 철수했던 우버가 SK텔레콤과 손잡고 반격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주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버

치를 인정받은 티맵모빌리티를 2025년 4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에 약 5000만 달러(약 562억원), SK텔레콤과 함께 설립하는 조인트벤처에 1억 달러(1124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분율은 우버 51%, 티맵모빌리티

49%다. 우버가 SK텔레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된 데에는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의지가 들어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우버는 지난 2013년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엑스'를 국내에서 출시했다가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015년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택시 호출서비스로 국내 시장에 재진출했다.

최근에는 가맹택시 서비스 '우버 택시'의 시범 서비스를 서울 지역에서 시작했다. 우버 택시는 일반 택시와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며, 승객은 우버 앱에서 기존 서비스인 일반 택시, 우버 블랙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우버 택시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우버는 현재 600여 대 수준인 택시를 1분기 이내에 가맹택시를 1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티맵 택시 앱을 이용하는 운전 기사가 20만명에 달해 향후 시너지도 기대된다.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보다 좋은 혜택을 기사들에게 제공하며 기사 영입에도 힘쓰고 있다.

한 택시 기사는 "카카오는 독점하고 있다 보니 돈을 풀 이유가 없는 반면 우버는 기사가 다른 기사를 소개하면 5만원을 추가로 주는 등 금전적인 혜택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맹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 기사가

되어 운행하려면 교육비, 복장, 맵핑 기계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 반면 우버는 오히려 축하금 15만원을 주고 시작한다"며 우버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했다.

우버는 이용자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 중이다. 우버 택시를 처음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운행 거리에 따라 최대 만원 할인을 제공하며, 이후 탑승부터는 3월 말까지 20%를 상시 할인해준다.

또한 승차 거부 없는 택시를 위해서 운전 기사계 목적지가 노출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변에 있는 우버 택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차량 내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위생 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티맵을 이용하는 20만명의 택시 기사와 우버가 합쳐진다면 카카오가 점령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스마트팜 찾은 박영선 전 장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스마트팜 '새싹상 재배실'에서 길러지고 있는 인삼을 보고 있다.

/뉴시스

세계식량가격 고공행진… 8개월 연속 상승

농식품부, 1월 4.3% 상승한 113.3p
곡물가 7.2%, 유품류 5.9% 상승

옥수수와 밀 등 주요 곡물과 가금육 가격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세계식량가격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축산식품부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2021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08.6포인트) 대비 4.3% 상승한 113.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FAO 식량가격지수는 8개월 연속 상승하며 1년 전보다는 10.5% 올랐다. FAO는 1990년 이후 24개 품목의 국제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곡물, 유품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 100)를 작성해 매월 발표한다.

우선, 곡물가는 전달보다 7.2% 상승한 124.2포인트를 기록, 전년동월 대비 23.6% 상승했다. 옥수수는 미국의 생산량 저조와 재고 감소, 중국의 대량 구매, 아르헨티나의 수출 일시중단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1.2%, 전년동월

대비 42.3% 급등했다. 밀은 옥수수 가격 강세 등에 따라 6.8% 올랐고, 쌀은 아시아·아프리카의 높은 수요와 태국·베트남의 공급량 부족으로, 보리는 수요 증가와 옥수수·밀·대구 가격 상승 영향으로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유품류는 전달보다 5.9% 상승한 138.8포인트를 기록했고, 전년동월 대비 27.7% 올랐다. 폭우로 인해 생산이 저조한 팜유 가격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두는 아르헨티나 파업 장기화와 수출량 감소로 8개월 연속 상승, 해바라기씨유는 수확량 감소에 따른 세계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올랐다.

육류는 전달 대비 0.9% 상승한 96.0%로 소폭 상승했다. 가금육이 수입 수요 증가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의 수출 제한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쇠고기·양고기는 출질을 앞둔 중국의 높은 구매량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충분히 소폭 상승했다. 반면, 양고기 가격은 오세아니아 공급량 부족과 중국발 수요 강세에 따라 4개월 연속 올랐다.

유제품은 전달보다 1.5% 오른 111.0

포인트를 기록했다. 버터와 전지분유, 탈지분유는 가격이 올랐지만, 치즈는 미국의 재고 축적과 유럽 내 판매 감소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

설탕은 전달 대비 8.1% 상승한 94.2 포인트를 기록했다. EU·러시아·태국의 작황 악화 전망과 남미의 건조한 날씨에 따른 세계 공급량 감소 우려에 따른 결과다.

또 최근 원유 가격 상승,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 해양화 강세, 견고한 수입 수요도 설탕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설탕 수출 세계 2위인 인도에서 사탕수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고 인도 정부의 2020/21년 수출 보조금이 승인됨에 따라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020/2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억 4430만톤으로 1년 전보다 1.3%(3640만톤) 증가하고,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7억 6140만톤으로 1년 전보다 1.9%(5170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곡물 기밀 재고량은 8억 210만톤으로 전년 대비 2.2%(1780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회계부정신고 72건… 포상금 4억 지급

금융위, 작년 포상금 지급액 3조 ↑

지난해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72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동안 지급된 포상금은 4억 84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원 가량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지난해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72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회계부정의 명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면서 회계부정신고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지난해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5건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고의 4건, 과실 1건) 과정금 부과, 검찰고

발 등으로 조치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행위 제보자에게 지난해 포상금을 총 4억 840만원 지급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신고한 9명에 대해 2019~2020년 중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 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490만원이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했다.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에 한정됐지만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됐다.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보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공공재건축에 용적률 최대 500% 부여

» 1면 '규제완화 공공재개발…' 서 계속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 재개발(50~75%)보다 낮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도 장점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300~500%까지 부여하고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했다. 최고 층수 제한은 35층에서 50층으로 상향한다.

새로 도입된 공공 적절시행 정비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은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며 기존 공공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지난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신문로2-12 ▲양평13 ▲양평14 ▲봉천13 ▲신설1 ▲용두1-6 ▲강북5 ▲흑석2 등 8곳을 선정했다.

/정연우 기자 yw964@